

<b>의안 번호</b>	<b>1382</b>	<b>【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b>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가. 제 출 일 자 : 2017. 9. 6.(목)
- 나. 제 출 자 : 이효상 의원 외 8명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9. 8.(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9. 18.(월)

## 2. 제안이유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명칭과 조문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나. 지원 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명시함.(안 제1조)
- 다. 노인세대를 “만 68세”를 “만65세”로 하고, “다자녀세대”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 라. 지원대상에 다자녀세대를 추가함(안 제3조)

## 4. 근거법규

- 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나.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운영원칙)
- 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하고  
노인세대를 노인연령 기준에 맞게 만65세 이상으로 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를 추가로 정하는 것임.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거법규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

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